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2025년 → 2026년으로

### 교육부, '유아교육·보육 통합' 실행방안 발표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 일원화·통합기관 도입 교육청·지자체, 업무 이관과 추진 계획 마련 분주

정부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한 해 늦춰 이르면 2026년 통합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업무 이관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있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고, 0~5세(한국나이 1~7세) 통합기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 조직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유

치원 관리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통합기관 모습은 이르면 2026년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매년 1000개교씩 늘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

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단, 최종 통합안이 나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장 관심이 높은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입소 방식이다.

현재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을 선택하는 구조인데, 두 기관의 입소 결정 방식과 선정 시기 등이 달라 현장 혼란이 크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법적 지위와 자격 취득 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보

통합추진단'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추진단 산하 실무팀을 꾸려 유보통합 시행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온 만큼 정원 조정, 행정기구 이관 등 업무 이관 절차나 계획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내 어린이집은 404곳, 유치원은 120곳(2곳 휴원)이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04개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학교라 생각해야 한다. 현재 192개 학교에 404개 학교가 생기면 거의 600개 학교가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 혼자 돌아 보려면, 아마 몇 년이 걸려도 못 돌아볼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한 정부부교육감(제2부교육감)직 신설을 강조한 바 있다. 강다혜기자



장맛비 내린 날, 장관 이룬 영도폭포 제주 전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영도폭포에 엄청난 폭포수가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상국기자

# 유류세 인하폭 축소 되는데... 가격도 급등

### 제주 휘발유 1당 평균 1740원으로 2주 새 55원 올라 전국 '최고'

제주지역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앞두고 2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휘발유 리터당 평균가는 1740원으로 전국에서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

전날(29일)보다 21원 올라 전국 평균 1669원보다 71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 22일 34원이 오르며 1700원대로 올라선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제주지역 경유 평균가 역시 1598원으로 전국평균 1501원보다 97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서울 1595

원을 제치며 경유가격도 전국 최고가 수준이다.

경유 역시 지난 22일 35원이 오른 후 2주 연속 주말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도 37%에서 30%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인하폭은 1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 61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41원, 38원, 12원씩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오르게 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했고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국내 기름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영석기자 yswil968@ihalla.com

**부영사랑으로**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 도, 4·3 희생자 5차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전체 대상자 중 2700명  
현재까지 3395억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5차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차 신청 대상은 전체 4·3

희생자 1만4822명 중 2700명이며 보상금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행정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

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로 나눠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8434명(1~4차 대상자)이 신청했으며, 이 중 4435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4만5240명에게 총 339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위영석기자

**독자제보 750-2232**

# "농지이용 실태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 도, '최대 300만원' 농지법 시행령 7월부터 반영

올해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작될 '2024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반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도내 4만6711필지(면적 8916ha)이다.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농지가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도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

단 휴경 등 농업경영 현황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해당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올해 조사부터 반영되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지은기자

**무료입장**

예술과 함께 하는 삶, 예술과 함께 하는 제주

VISION UP JEJU UP

**2024 7/4(목) - 7/7(일)**

## 제3회 제주국제아트페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정 SCHEDULE**

7.4 (목)	VIP/Press	16:00 - 20:00
7.5 (금)	일반	10:30 - 19:00
7.6 (토)	일반	10:30 - 19:00
7.7 (일)	일반	10:30 - 18:00

**장소 VENUE**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 ICC)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제주국제아트페어 사무국]  
064) 757-4477  
[2024 제주국제아트페어 홈페이지]  
http://jjaf.kr

주최\_제주화랑협회 | 주관\_제주국제아트페어 JIAF 운영위원회 | 후원\_제주특별자치도